

## 경제학 교육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대안적 경제학 교육을 위한 약간의 모티브들\*

김 영 용\*\*

**논문 초록** 이 연구는 고도로 추상적인 모델의 사용과 보이지 않는 손 명제의 옹호로 요약되는 표준적인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안적 경제학 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이 연구는 제도주의적 접근과 ‘기에 경제학’ 개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은 오늘날 중등학교 경제 교육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도 약간의 통찰을 제공한다.

**핵심 주제어:** 경제학 교육, 제도주의, 기에 경제학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2, B4

\* 다음 두 가지 요인이 이 글의 작성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첫째 필자는 지난 수년간 경제학 원론 강의를 행한 바 있는데 강의를 할 때 마다 주류 교과서의 방법 및 내용의 한계를 깨닫곤 하였다. 둘째 얼마 전 필자는 경제교과서 논쟁에 관한 안현효 교수의 글(안현효 2006)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그를 통해 필자는 제도주의적 접근이 논쟁에서 한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원론 강의의 교훈과 안교수 논문의 독서는 필자로 하여금 기존 경제학 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다 주었고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학 원론 수강생들과 안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부족한 글을 읽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경북대 오영수 교수와, 박소정 박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깊은 감사 드린다.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e-mail: rladuddyd@gmail.com

## I. 서론: 2000년 6월 프랑스

2000년 6월 프랑스에서는 일부 대학생들이 경제학 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며 인터넷 웹상에서 청원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 오늘날 경제학은 수학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모델로 구성된 상상의 세계(imaginary world)로 도피하였다. (2) 또한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대학의 경제학 커리큘럼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 결과 경제학 교육은 일종의 도그마가 되었다. (3)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로부터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 능력을 빼앗아 가버렸다.

이러한 학생들의 청원 운동은 이후 놀라운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학생들의 청원 이후 경제학 교사 및 교수들의 동조 서명이 줄을 이었고, 일간지와 학술지에서 경제학 교육의 미래를 둘러싼 공적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0월에는 경제학 교육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의 과학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청원 반대 주장을 발표하였다.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고 결국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논쟁에서 제기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피투시(Fitoussi) 위원회를 구성하였다(Fullbrook 2003).

마치 18세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프랑스 내에서의 이러한 열기는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로 전파되었다. 2001년 6월에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박사과정 학생들 역시 “경제학의 개방(Opening Up Economics)”을 요구하며 청원 운동을 시작하였다. 9월에는 미국 캔사스 시티에 모인 75명의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개혁을 요구하는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부생들에 의해 커리큘럼 개정 운동이 시도되었다(McIntyre 2003).

프랑스 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후 일부 경제학 교사들 역시 지지하였고 국제적으로도 공감대를 얻은 이 운동은 곧 Post-Autistic Economics Movement (탈 자폐적 경제학 운동)로 조직화 되었다. 돌이켜 보건대 이 운동에 대한 열렬한 반응은 주류 경제학을 향한 학생들 및 교사들의 불만과 실망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이후의 논의에서 분명해지겠지만) 이러한 불만과 실망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며 이는 이후 경제학 교육 개혁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대학 강단에서 강의되는 표준적 경제학이 경제학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검토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 인식과 현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검토하고자 한다(2절, 3절). 여기서 표준적 경제학이란 앞서

처음 프랑스 학생들이 비판해 마지 않았던 신고전과 경제학으로 이는 방법적으로는 추상적인 경제 모델의 사용으로 나타나고, 내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 명제의 옹호로 대변된다. 한편 또 다른 인식과 설명의 방법이란 전통적으로 ‘제도주의’라고 명명되어 왔던 접근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논의된 제도주의적 접근의 유용성은 또한 중등학교 경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적용은 중등학교 경제 교육 문제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다소간의 실마리를 제공할지 모른다(4절).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도주의가 대안적 경제 교육 방식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정책 수단들을 검토할 것이다(5절).

## II. 경제학 모델의 한계: 제도주의적 설명 방식의 필요성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학 원론 첫 시간에 듣는 이야기는 경제 모델에 관한 것이다. 모든 경제학 원론 교과서들은 경제학자처럼 사고하기(thinking like economist)의 전형으로 경제 모델링을 언급한다. 오늘날 현대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경제학 연구들이 갖는 공통분모는 ‘경제 문제에 대한 모델적 접근(Colander 2003)’이다. 이처럼 경제학에서 모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소위 경제학적 사고 방식(The way of economic thinking)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이 사고 방식에 따르면 사실은 스스로를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매개로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그 매개가 다른 아닌 모델이다.<sup>1)</sup> 2000년 여름부터 시작된 프랑스에서의 논쟁에서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경제학의 과학성’이란 대의 역시 바로 이 모델로 표현되는 경제적 추론(economic reasoning) 방식을 의미한다.

모델 혹은 더 자세한 이름으로는 ‘가설 연역적 모델 설명 방식(hypothetico-deductive model of explanation)’이 경제학에 도입된 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리카도

1) 예를 들어 프랑스의 과학자 프앙카레(Jules Henri Poincaré)는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비를 도입하였다; “마치 집이 돌들로 구성되듯이 과학은 사실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돌들의 무더기가 집이 아니듯이 사실들의 누적이 과학은 아니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경제학에서도 그대로 수용된다(Borjas 2005).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듯이 집을 짓기 위해 돌로 벽돌을 만들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래의 돌 성분은 상당히 훼손된다.

로부터 이며 그 이후 시니어(Senior) - 밀(Mill) - 케언즈(Cairns)의 전통을 통해 이러한 경향이 경제학 연구의 표준으로 굳어졌다. 이들 초기 모델 수립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경제학의 출발점이 직접적인 귀납이나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연 속성이나 인간 본성에 관한 선험적(a priori) 가정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예를 들어 토지의 생산물 체감 법칙이나 인간의 이기심 등). 경제 모델은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함의에 이르는 순수하게 연역적인 과정으로 구성된다. 어떤 특별한 전제 아래에서만 그 결과가 참이 되는 기하학이 이러한 모델의 속성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Blaug 1992).

‘경제 문제에 대한 모델적 접근’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경우 모델이 내리는 결론이나 함의가 현실과는 상당히 독립적이라는 사실이다. 출발 그 자체가 현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지만 모델의 궁극적 목표가 현실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분명 놀라운 일이다. 경제 모델에 내재한 이러한 문제점이 명백해질 때 조차, 종종 경제학자들은 “비록 실제 세계의 작동이 내 모델의 결론과 다를지라도 원리적으로(in principle) 이러한 답을 안다는 것은 그래도 중요한 일이야”라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경제학자들은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인지(認知) 자원은 얼마나 부족한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다; 수단이 제약될 때 경제학자들이 의존하는 것은 제약하 최적화 과정이며 모델은 현실 인식 과정에 있어 그러한 최적화 의사 결정의 결과물이다.

경제학 내부에서도 이러한 모델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슈페터에 따르면 리카도는 자신의 고도로 추상적인 모델을—그것은 소수 변수들간의 단조적 관계에만 기반하고 있다—실제 세계라는 복잡성에 직접 적용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쉽게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하였다. 슈페터는 이러한 이론적 조급성을 ‘리카도적 폐습(Ricardian Vice)’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고도로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분석을 현실에 제한적으로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실패할 때면 언제나 발생하는 위험(Foxwell 1899)”에 대한 경고이다. 사려 깊은 일부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가정들의 추상적 비현실적 성격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이해 없이 중대한 현실 문제를 결정하는데 모델이 주저 없이 적용되었을 경우(Foxwell 1899)” 초래되는 문제점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경제학자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곤 하였는데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그 첫째가 장기적

경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모델에서 예측한 경제적 힘들의 작동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많은 교란 요인(disturbing causes)들이 작동하지만 장기라고 정의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들 단기적 교란 요인들이 서로 상쇄되고 모델의 결론에서 도출된 경향이 보다 순수하게 그리고 뚜렷이 발현될 것이다. 예를 들어 리카도에게 있어 곡물 가격의 상승이나 한계지로의 경작 확대와 같이 곡물 모델에서 예측한 경향들이 영국 자본주의에서 출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5년의 장기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은폐하지는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개념에 의존하는 이전의 방식은 사실상 동어 반복인 셈인데 왜냐하면 예측은 장기에서 실현되며, 이 때 장기란 예측이 실현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Fiorito 1997). 이제 경제학자들은 보다 공식적(公式的) 수단으로 이 문제에 대처한다; 경제 법칙을 도출해 내기 위해 동원된 모델은 그것이 구성되는 단계에서 *Ceteris Paribus* 가정을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Blaug 1992) 문제 자체를 체계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CP 가정 도입으로 모델은 이제 폐쇄계(closed system)의 속성을 갖게 되고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간의 상호작용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문제점 그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CP 가정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문제 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전과 경제학자: 현실 + 장기 개념 = 추상 모델의 결론  
(현실 - 교란 요인 = 추상 모델의 결론)

오늘날 경제학자: 현실 + CP 가정 = 경제 법칙

경제 모델이 현실과 괴리된다면 그것은 단기적 상황 때문이거나 혹은 교란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처럼, 경제 법칙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CP가정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는 이러한 CP 가정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존재한다. 이는 어떤 의도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독립 변수를 조정할 경우 CP 가정에 묶여있던 다른 독립 변수도 불가피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sup>2)</sup>

모델과 현실 간의 괴리는 모델 수립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모델의 결론을 기획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이론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모든 것은 이론적으로 증명될 수 있기(Theoretically, anything can be proven theoretically Kangas 2006)” 때문에 이제 모델 수립자는 자신의 선호와 취향, 혹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는 모델이 도출해 낼 결론을 먼저 정하고, 다음으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역 과정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그 과정이 처음 출발할 가정을 설정한다.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델의 임의성 혹은 자의성은 모델의 내적 논리 일관성과는 전혀 무관하다. 얼마든지 많은 오류들이 내적으로도 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델에 대한 비판은 많은 경우 모델 외부로부터 주어질 수 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모델의 자의적 속성으로부터 모델의 결정론적 성격이 파생된다는 점이다. 모델에서 등장하는 경제 주체들의 내적 본성은 그것을 고안했던 “이론가들의 합리성(Cullenberg 1994)”에 의해 미리 주어진다. 이론가들은 모델 내부에서 경제 주체들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경제 주체들이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행위는 전적으로 그 위치에 의존한다. 경제학 원론의 첫 장은 대부분 기회 집합과 선택에 관한 논의를 다루기 때문에, 혹은 제약하의 최적화 계산 과정은 과잉 사회화나 구조주의의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고전과 경제학이 경제 주체의 선택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경제 이론가들이 자신의 모델 구성에서 흔히 사용하는 선호 함수의 경우(Hodgson 1998)를 살펴보자. 사전에 결정된 선호 함수에 의해 경제 주체의 선택은 벌써 고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다. 선호 함수는 프로그램이며 경제 주체는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유 의지가 결여된 이러한 경우를 진정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기존의 추상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교란 요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고전학파의 경우 이 교란 요인이라 추상적 시장 법칙 발현의 제약 요소이며 현실 세계에서 이는 다름 아닌 제도에 해당한다.

시장 경제 현실 - 제도 = 추상적 시장 법칙

2) 보다 자세한 논의는 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비단 신고전파만이 이런 입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맑스 경제학 역시 추상적 모델에 기반해 있고 이와 유사한 태도를 갖는다. 후자의 경우 전자의 순수 시장 모델을 대신하는 것이 순수 자본주의 모델이다.<sup>3)</sup>

자본주의 발전 동학 - 제도 = 추상적 축적 법칙

그것이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에 근거하고 있든, 아니면 맑스 비율(Marxian ratio)에 근거하고 있든 상관없이, 두 입장 모두 제도를 이론이 예측한 일정한 경향 발현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유연성 저하는 시장 청산을 방해하고, 경제 주체의 낮은 탄력성은 시장 조정을 지연시킨다. 또한 자본 축적과 관련한 새로운 반경향은 이윤율 저하를 억제한다. 유연성(및 탄력성) 저하와 반경향은 제도의 존재에 기인하거나 제도적 형태를 갖는다.<sup>4)</sup> 따라서 이론 구성에서 두 입장 모두 현실 제도를 소극적인 요소로 취급한다.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장경제 현실이나 자본주의 발전 동학의 이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adding up approach)을 전제한다.

추상적 시장 법칙 + 제도 = 시장 경제 현실

추상적 축적 법칙 + 제도 = 자본주의 발전 동학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경제 문제에 대한 모델적 접근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허용한다 “망치가 유일한 도구가 되었을 경우, 모든 문제는 이제 못을 닦아

3) 여기서 말하는 맑스 경제학은 특히 맑스 경제학의 결정론적 버전을 의미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몇 개의 핵심적 파라미터들, 즉 잉여 가치율, 자본의 유기적 구성, 이윤율 등과 같은 맑스 비율에 의해 그 발전 경로가 예측될 수 있다. 맑스 경제학 내부의 이러한 시각은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더불어 리카도적 폐습을 공유한다. 그러나 맑스 경제학 내부에는 이러한 접근과는 구별되게 제도를 축적 분석에 중심으로 두는 입장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적 축적구조론이나 프랑스의 조절이론이 그러하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맑스 경제학은 맑스 경제학 내부 구성에서 특정한 분파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4) 만일 제도의 속성이 경제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라면 신고전파 경제학과 맑스 경제학은 비경제적 요인이 순수 경제적 요인의 운동을 제약한 것으로 이해한 셈이다. 이 점은 이후 기에 경제학에 관한 설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간다(Abraham Maslow Kangas 2006).” 즉 모델링만을 유일한 분석 방법이라고 여길 경우 모델을 문제에 맞추는 대신 문제를 모델에 맞추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제 이론 공구 상자 안에 망치와는 다른 새로운 도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도구, 즉 제도주의 덕택에 테크닉으로부터 시작하여 문제를 그것에 맞추는 나쁜 습관이 고쳐질 수 있다.

제도주의적 접근은 경제학이 다루는 대상이 복잡계(complex system)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다는 점에서 모델적 접근과는 큰 차이가 난다. 모델적 접근 역시 현실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 경우 복잡성은 모델을 통해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재구성된다. 즉 현실은 “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균형을 변경(Dormen 2001)”시키는 이동 표적(moving target)이지만 추상적 모델은 이러한 현실의 복잡성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도록 강제 당한다. 반면 제도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복잡계 그 자체가 “정의상 최초의 원리(the first principle)로부터 그 결과를 연역해 내기 극도로 어려운 대상”이며 따라서 추상적 모델링은 현실 인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 역시 “선험적 원리를 사용하여 그들 행동을 연역할 수 없다(Edmonds 2001)”는 의미에서 복잡계의 일부이다. 따라서 제도주의의 경우 다루는 대상의 속성에 관한 상이한 인식으로 인해 추상적인 모델링과는 다른 접근법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제도주의는 현실 경제 주체들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발생하는 패턴이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에 주목한다. 이로 인해 제도주의는 형식적인 연역을 대신하여 귀납의 불가피한 도입을 인정하고 경제학 분석에 역사적 비교적 경험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이러한 제도주의적 접근이 물론 모델링 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패턴을 추출해내거나 정형화된 사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상 과정(abstraction process)이 동원된다는 의미에서 제도주의 역시 모델링 방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주의적 접근은 선험적 가정으로부터 주체의 행위를 연역하는 대신 광범위한 관찰을 통해 주체의 행위를 추측한다. 이 경우 추상이 활용되었지만 그 수준은 기존의 모델적 접근 보다 더 낮을 것이고 가정 역시 부분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성격은 매우 판이하다. 따라서 제도주의적 접근이 활용하는 모델링은 보다 묘사적인 속성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약한 형태의 모델(weak form of model)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5)</sup>

예를 들어 제도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조절 이론의 경우 현대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 축적 체제나 조절 양식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프레임 워크가 묘사적 모델(descriptive model)의 한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아마도 조절 이론가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동학을 묘사하기 위해 역사적 경험적 사실에 관한 광범위한 관찰을 수행했을 것이고 이로부터 패턴을 찾았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조절 양식이라는 개념이 출현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묘사적 모델은 IS-LM 모델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선형적 모델의 경우 가장 중요한 미덕이 예측(prediction)이라면 묘사적 모델의 그것은 이해(verstehen: Samuels 1991)라고 볼 수 있다.<sup>6)</sup>

현실 세계와 괴리되는 대신 그것을 묘사하려는 제도주의적 접근은 고도로 추상적인 선형적 모델이 가졌던 자의적이고 결정론적인 속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묘사적 모델의 출발은 모델 수립자의 의도에 맞추어 설정되는 가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선형적 모델이 가졌던 자의적 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선형적 모델에서 전제되거나 주어진 가정들이 묘사적 모델에서는 설명되어야 할 대상들이다(예를 들어 모델에서 전제되고 있는 시장이나 사유재산 제도, 합리적 개인 등의 개념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가?). 또한 제도주의적 접근은 경제 주체의 행위 양식을 선호 함수로 미리 프로그래밍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론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다. 예를 들어 자본가라는 경제 주체는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측면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자본가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의 “상이한 금융적 처지, 정치적 영향력(Cullenberg 1994)”이라는 측면을 통해서도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가가 특정한 문제에 직면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열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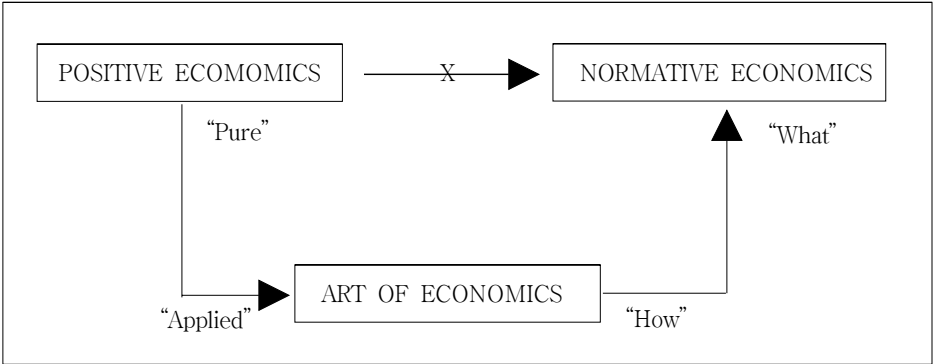
경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경제학 교육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경제학의 범주를 구분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해 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경제학 원론 교과서의 도입부에서는 경제학을 크게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으로 구분한

5) 경제학 내부에서의 방법적 차이를 자연과학 영역에서 다시 확인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고도로 추상적 모델이 물리학의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면 여기서 언급된 묘사적 모델은 생물학의 그것에 해당한다. 뉴턴은 이 세상이 깔끔하고 산뜻한 역학 법칙들에 의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반면, 다윈은 세상이 더욱 어지럽고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믿었다(Edmonds 2001). 예를 들어 우리는 100년 후의 개기 일식을 거의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반면 외국의 새로운 종이 지역 생태계에 유입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6) 조절 이론의 경우 미래의 다가올 축적 체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예측이 없는 대신 지나간 과거의 축적 체제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설명한다는 ‘불평’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다.

다. 우리는 이러한 구분에 대단히 익숙해 있지만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구분은 다소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실제 경제 문제를 다룰 때 자주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새로운 논의 체계가 필요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규범 경제학의 기본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경제학자들은 실제 경제 문제의 해결 과정에 종종 비경제적 요소가 개입되곤 한다는 점 역시 깨닫게 되었다. 이 둘간의 깊은 관련성으로 인해 현실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여건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비경제적 요인들이 교란 요인에 불과하다거나 CP 가정을 통해서 거를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었다. 규범 문제를 다룰 새로운 체계가 필요했던 것처럼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 사이의 관계를 다룰 독립적 체계가 요구되었는데 이를 존 네이빌 케인즈(John Naville Keynes)는 기예 경제학(技藝 經濟學, art of economics: 이하 AE)이라고 이름 붙였다(Colander 1999).<sup>7)</sup> 따라서 경제학의 원래 체계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였다.

〈그림 1〉 경제학의 3가지 체계



7) 케인즈는 자신의 저서 〈The Scope and Method of Political Economy〉에서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 어떤 현실의 문제도 오직 경제적 근거에만 토대를 둔 해결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과세나, 국가와 무역 산업 간의 관계, 혹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도식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검토할 때 경제적 고려만이 유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없다. 그에 대한 설명에는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고려 역시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범위 바깥에 놓여 있다. . . 현실의 문제를 다룰 때 추상적 방법은 덜 유용하며, 우리가 이론적 문제를 다룰 때 보다 훨씬 더 성과가 낮다. 요컨대 전자 유형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역사나 귀납적 일반화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Colander 1992: 193에서 재인용).”

먼저 규범 경제학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지는 어떤 경제 목표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증 경제학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현실의 경제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없다. 즉 빌프레도 파레토의 말대로 우리는 “순수 경제학 그 자체 만으로는 그 어떤 실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Blaug 1992).” 왜냐하면 순수 경제학이 그 토대로 삼고 있는 추상적 경제 모델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빈약하며 자의적이고 결정론적이므로 복잡한 현실 세계를 충분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규범 경제학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칙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거의 틀림없이 비경제적 요소에 직면하게 된다. 현실의 경우 경제적 관계는 정치적 사회적 관계와 촘촘히 엮여 있기 때문이다. AE는 목표 달성 규칙체계의 비경제적 속성으로 인해 도입되는 경제학 체계이다. 한편 순수 경제학으로서의 실증 경제학은 응용 경제학으로서의 AE에 대해 규칙 체계 내부의 논리적 일관성을 보장할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규범 경제학이 “어떤 목표인가?”라는 문제(“what”)에 관심을 갖는다면 AE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how”)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실증 경제학이 순수 원리(“pure”)를 다루는 분야라면 AE는 그 원리의 응용(“applied”)을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일부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신중함과 세심함은 불행하게도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현실 경제 문제를 다루는 응용 분야에서도 실증 경제학 체계의 연구 방법인 공식적 모델링을 사용한다. 즉 오늘날 경제학자들의 분석 과정에서는 응용과 수단 체계인 AE가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나 그 결과 ‘리카도적 폐쇄’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볼 요량으로 경제학자들은 모델에서 도출된 결론을 정치적 사회적 차원-즉 비경제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는 수고를 떠맡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분석의 결과와 수준은 그 가운데 가장 덜 정교한 부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후약방문식 분석은 일종의 이론적 낭비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정치적 사회적 차원이 정교하지 못하므로 응용경제이론을 정밀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최종 결과의 정밀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Colander 1992).

따라서 우리는 현실 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 실증 경제학을 통해 규범 경제학의 문제에 직접 답하는 대신, 실증 경제학적 지식을 규범 경제학에서 결정한 규범적 목표와 연관시킬 AE를 도입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많은 문제들의 성격이 왜 분석에서 AE 체계가 도입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일국 경제가 일정한 생활 수준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가 가져다 줄 잠재적인 이득은 어떤 수단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실현된 이득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사회적 부가 증대하고 경제가 성장함에도 왜 실업과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해지는가?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이 개방될 경우 일국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는 무엇인가? 금융 부문의 확대는 산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유의 문제들은 사실상 응용 경제학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순수 경제 모델로 답할 수 없다. 이 경우 AE적 접근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AE 체계는 (묘사적 모델을 포함한) 제도주의적 접근과 깊은 관련성을 맺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추상적 시장법칙이나 축적법칙을 강조하는 입장의 경우, 제도는 시장 경제나 자본축적 과정의 주변 혹은 제약 요소로만 이해된다. 그러나 제도주의적 시각은 오히려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시장이나 자본 축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경제 분석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도주의적 접근이 공유하는 몇 가지 명제 (Samuels 1991)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1) 자원 배분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시장 기능 그 자체는 권력구조의 함수이다. (2) 소득 분배 역시 권력 구조의 함수이지만 동시에 권력은 소득 분배의 함수이기도 하다. (3) 기존에 알려진 개인의 미시적 행동 동기 이면에는 사회화의 힘이 작동한다. (4) 가치는 현존 기회집합에 대해 행해지는 선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회집합 구조의 형성에서 권력구조와 권력 행사의 동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주의적 명제들에 따르면 경제 분석에서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의무이다. 만일 제도를 정치적 사회적 관계가 안정화되고 규칙화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sup>8)</sup> 제도의 기원과 기능은 비경제적 요인을 분석 범위에 포함시키는 AE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도주의적 문제의식은 AE라는 수단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상 AE와 관련된다는 점은 현행 경제학 교육 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AE는 경제

8) 제도가 정치적 속성을 갖는다는 견해는 비단 구제도학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신제도학과 경제학자인 더글러스 노스는 제도를 사회 내 게임의 규칙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이는 제도가 인간의 상호작용을 낳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이라는 의미이다. 노스에 따르면 이러한 제약은 이기심을 추구하는 집단간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진화한다 (Aoki 1990).

학 교육의 목표가 우리 학생들 모두를 경제학자로 키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둘러싼 경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해 성찰적이고 비판적이며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시민을 키우기 위해서이다.<sup>9)</sup>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학자처럼 사고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르쳐야 한다. 경제학 교육의 이러한 목표는 AE를 통해 더 잘 성취될 수 있다.

실증 경제학이 아니라 AE가 경제학 교육의 주축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1) 학생들이 선험적인 경제 모형이나 고도로 추상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현실 경제 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 그것을 해석하고 사용하며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Colander 1992). 또한 (2) AE 도입으로 인해 추상적 모델이 아니라 묘사적 모델을 배우게 된다면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추상적 모델의 학습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예측이 아니라 이해가 미덕이기 때문이다. (3) AE의 도입은 경제학 교육에 있어 사회 및 정치적 측면과 역사 및 제도에 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실의 작동 원리와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Ⅲ. ‘보이지 않는 손’ 명제의 한계: 제도주의적 경제 교육의 모티브들

경제학 교육의 방법과 관련해 추상적 모델이 주된 문제점이었다면 경제학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도그마가 논란의 대상이다. 표준 경제학 내부에서 시장의 작동과 그 실패를 둘러싼 보수주의-자유주의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두 입장 모두 잘 작동하는 시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번영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믿는다(Lazonick 2003). 소위 ‘보이지 않는 손’ 명제와 관련된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도주의적 접근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제도주의적 접근이 기존의 경제학 체계를 대신할 만한 대안적 체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존 경제학 원론 교과

9) 이 문제는 나중 4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서를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철저히 재구성하는 일이다.<sup>10)</sup> 그러나 이는 많은 연구자들과 교사들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만 ‘보이지 않는 손’ 명제의 중요 구성 요소들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제도주의적 경제교육의 몇 가지 모티브들을 확인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 원론 교과서들은 그 도입부에 경제학자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갖는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들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내부에서는 공인된 “진리”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잊지 않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맨큐 교과서의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한다. 교과서 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 “거의 확실한 진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의지 아래에서 이루어진 교환은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2) 만일 무수히 많은 거래 참가자들이 존재할 경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가격 파라미터가 결정되고 이는 다시 모든 거래 참가자에게 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식된다. (3) 이처럼 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에 따르면 시장에 관한 공적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5) 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제도 장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잘 정의된 사유 재산권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재산권 제도의 도입은 환경오염과 같은 (-)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킨다. (6) 만일 사유 재산권이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부재할 경우 경제적 외부성이나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공재 문제는 그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 명제와 부속 명제로 구성된 이와 같은 표준 경제학의 주장을 이제 제도주의 및 AE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 1. 교환으로부터의 이득 혹은 자유무역의 이점

학생들에게 교환의 이득(gains from trade)을 보여주기 위해 대부분의 경제학 원

10) 예를 들어 경제학 이론 체계의 근본인 가격 이론의 사례를 들어 보자. 신고전파의 가격 이론이 효용이나 수요 공급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면 맑스 경제학은 노동 가치론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제도 경제학은 가격이 일종의 사회적 관습이며 습관에 의해 강화되고 특정 제도 틀 안에 착근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론 교과서들은 리카도의 비교 우위 원리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오래 전부터 경제학자들은 비교 우위 원리를 미묘한 경제학적 논증 방법을 이해하였는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여겨왔다. 요컨대 리카도의 이 모델은 현실 세계에서 교환의 호혜성을 입증하고 추상적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글로벌화 과정은 종종 이 리카도 모델에 의해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럼에도 이 모델은 생산요소는 고정되고 생산물만 자유롭게 교역되는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기에 그 정당화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도주의-AE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비교 우위 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유 무역이 초래하는 부(負)의 외부 효과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공적 토론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 자유 무역은 기술 변화와 동일한 것으로 그려진다. 사회의 생산이나 소비 가능 집합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요소까지를 고려하는 AE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언제나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로 인해 자유 무역은 “재분배를 초래하는 관행들의 공정함이나 정당성 문제(Rodrick 1997)”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옹호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유 무역으로 인한 산업 구조 조정과 그로 인한 부문간 이동은 특정 산업의 수요 곡선을 위축시켜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자유 투자 협정의 체결은 모빌리티가 떨어지는 집단(비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어 이들의 교섭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무역 및 투자 장벽의 소멸은 무자비한 세계 시장의 변덕으로부터 자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사회 계약(=복지 국가를 둘러싼 사회적 타협)을 파괴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화는 사회 계약 그 자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그것을 구축하는 수단 역시 파괴한다. 즉 최근의 글로벌화는 정부 규모의 축소와 그것의 사회적 의무 감소를 주장하는데 그로 인해 사회 보험 제공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Rodrick 1997). 요컨대 자유무역을 포함한 글로벌화의 확대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켜 일국 내의 시민 간(고용주-노동자, 숙련 노동자-비숙련 노동자, 내수부문 종사자-수출부문 종사자, 민간부문 종사자-공공부문 종사자) 이해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AE 체계 내에서는 중요한 토론의 주제들이다.

비교 우위 모델은 미리 결정된 직관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앞서 제기된 주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봉쇄된다. 이러한 모델의 자의적 속성은 이들 모델과 정반대의 함의를 갖는 대항 모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카도가 비교 우위 모델로 자유 무역의 호혜성을 보일 수 있었다면, 엠마뉴엘은 종속 모델로 무역을 통해 주변부 국가로부터 중심부 국가로 경제 잉여가 유출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김형기 2001).

대중들에게 교환 이득의 실제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CGE모델(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역시 크게 보아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갖는다. 도맨(Dorman)은 무역과 금융 자유화의 이점을 계산한 Brown-Deardoff-Stern CGE Model을 검토하면서 글로벌화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모델의 가정 단계에서 해소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글로벌화가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단 역시 박탈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설사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정 부분에서 고용이 감소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뿐만 아니라 구조 조정을 위해 부문간 이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쉽게 주거 지역이나 일자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염려한다. 그러나 CGE 모델은 (1) 모든 국가의 무역 수지가 불변이고 그 어떤 국가도 부채를 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외환 위기를 겪지 않고, (2) 완전 고용이 항상 유지되며, (3) 부문간 이동은 아무런 비용 없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글로벌화와 관련한 모든 논란 거리를 해소시킨다(Dorma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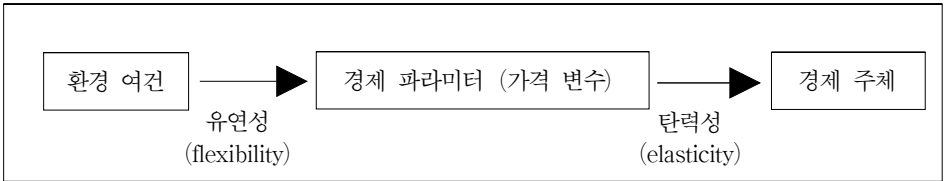
물론 AE가 항상 보호주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E는 자유무역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득의 증가 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 사회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는 시민들이 선택해야 하며 그 토론을 학교에서도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볼 때,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사전에 미리 기각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건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중대한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한 논의에서 학생들을 대단히 제한된 견해만을 수용하게 만들어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논의 과정 그 자체를 봉쇄해 버리기 때문이다.



## 2. 시장 과정 혹은 유연적-탄력적 조정

표준적인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시장 조정 기제는 일종의 파라미터적 조정 (parameter coordination) 이다; (1)  $n$ 명의 경제주체들이 상호 작용한 결과, 가격과 임금, 이윤과 같은 파라미터들이 형성된다. (2) 개별 경제주체들은  $1/n$  만큼씩 이들 파라미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그러나  $n$ 의 수가 충분히 커진다면 경제주체들이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0에 가깝게 되고 결국 파라미터 수용자 (parameter taker) 가 된다. (4) 경제주체들은 오직 파라미터를 통해서만 경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5) 파라미터는 환경 여건의 변화를 완전히 반영하고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필요한 조정에 관한 정보를 보낸다. (6) 이제 개별 경제주체들은 파라미터만을 관찰하고 스스로를 탄력적으로 그에 동조시킨다 (Tsuru 1968).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시장적 조정



만일 경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시장 경제의 옹호를 위한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의 경우 소수의 특권자가 다수 대중들의 노동 배분을 통제할 수 없다 (Lazonick 2003). 이러한 견해는 18세기 초기 영국 자본주의의 사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 세계가 더욱 복잡하게 진화해 나감에 따라 이전의 파라미터적 조정을 대신해 제도적 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조정 기제가 등장하였다. 새로운 조정 기제의 제도적 속성은 대상 세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직접 기인한다. (1) 복잡성이란 구조적 연관성의 밀도, 즉 상호 의존적 체계 내에서 부분들간의 밀도를 의미한다. 제한된 계산 능력을 지닌 채 복잡성에 직면하였을 때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 모델 안에서 계산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 경우, 우리는 불가피하게 습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Hodgson 1997). 또한 복잡성의 증대로 인해

보편적 상호 의존성은 외부성의 형태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외부성의 증가는 이를 흡수하고 내부화할 사회 제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제도의 매개를 통해 분권적 의사 결정에 기초한 개인 행위는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그로 인해 관련된 상호 의존성은 시스템에 대해 내적인 것이 된다(Hall and Taylor 1996). (2) 한편 불확실성의 문제란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는 정보의 분석이나 접근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관련된다. 불확실성이라는 상황은 특정한 습관이나 루틴이 지배적일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Knight: Hodgson 1997). 또한 불확실성이 지배적일 경우 경제 주체의 전반적 성과는 정보 사용의 유연성을 제약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즉 불확실성은 규칙을 발생시킨다(Heiner 1983).

요컨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풍부한 세계에서는 제도가 사망 도처에 존재하고 작동할 것이다. 제도는 가격 파라미터와 마찬가지로 “압축된 정보의 전달자로서 영역의 내부 작동에 관한 특징을 요약하며 대변”하고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행위 선택은 이들에 의해 가이드 되거나 제약(Aoki 2001)”된다.<sup>11)</sup> 그러나 제도는 가격과는 달리 제도 변화의 임계점 아래에 위치하는 한, 많은 경제 주체들의 다양하고 가변적인 행위를 버퍼링(buffering) 함으로써 대단히 ‘안정적인’ 속성(Hodgson 1998)을 갖는데 이는 가격 파라미터 조정과는 정반대의 속성이다. 따라서 제도적 조정이 지배적인 경우 유연성과 탄력성은 상당히 제약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적 조정만을 지면에 할애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 원론 교과서는 현실 세계의 많은 부분을 외면하는 셈이다.

만일 실제 세계가 가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조정된다면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독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분명 오류이다. 제도는 권력 구조의 함수이며 따라서 제도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조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AE 체계는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

11) 신고전과 견해에 따르면 제도는 일종의 제약이며 시장가격이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주어 진다는 의미에서 가격 역시 제도이다. 이를 근거로 쿠프맨(T. Koopman)은 “시장 제도의 기능이란 의사 결정자에게 생산 가능성, 자원 이용 가능성, 다른 의사 결정자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가격이나 시장은 넓은 의미의 제도에 포함되지만 신고전과 주장은 오로지(재산권과) 시장-가격 메커니즘만이 유일한 제도적 제약이어야 한다는 규범적 견해를 고집하기 때문에 오류라고 볼 수 있다(Boland 1992: 114-5). 사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그리고 아마도 재산권과 약간의 시장 기반 법률들을) 제외한 모든 제도적 제약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리한 권력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 3. 사적 이기심 혹은 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

표준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후생 경제학 제1정리, 혹은 소위 ‘보이지 않는 손’ 정리에 따르면 경쟁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지 않고, 이기심이라는 동기에 의해 추동되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집계되었을 때 사회적 후생은 극대화되며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제도주의나 AE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정리는 법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예외에 해당할 경우가 많다.

흔히 이야기 되듯이 시장 경제에서 생산자가 이윤을 얻는 방법은 (1) 경제적 파이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질을 개선하는 것 (2) 파이를 굵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 이윤을 증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3)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통해 파이를 다시 자르는 것이다. 즉 생산자는 (산성비, 스모그, 소음 공해 등의 형태로) 보상 없이 비용을 외부화시키고 이득을 전유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보다 더 큰 파이 몫을 차지할 수 있다(Hahnel 1997).

생산자는 자기가 초래한 (-) 외부효과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얻을 뿐 아니라 동시에 외부효과를 매개로 한 위협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외부효과를 다루면서 경제학 교과서들은 정부 개입 없이도 민간 경제주체들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외부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A와 B는 서로 이웃인데, A는 개를 키움으로써 즐거움을 얻고 B는 이웃 A집의 개 짖는 소리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자.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누구에게 법적 권리가 주어지는가와 무관하게 양자는 협상을 통해 스스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한다(Mankiew 2002).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은 “A가 협상을 통해 B로부터 금전적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부 비경제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종종 간과한다. 즉 A는 개를 키움으로써 전혀 즐거움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개 짖는 소리를 유발하여 B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똑같은 원리로 강 상류에 위치한 제철소 공장주는 강 하류에 거주하는 어부들에게 외부 비경제를 부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그 주위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

회적 비용이 보다 크고 유쾌하지 않을수록, 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보수는 커질 것이다. 극대화 가정에 따라 그는 다른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유쾌하지 않고 유쾌한 사회적 비용의 극대치를 창출할 것이다(Hunt 1979, 1980).”

이러한 사실은 사익의 추구가 공익을 가져다 준다는 보이지 않는 손 명제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헌트가 ‘보이지 않는 발(invisible foot)’이라고 명명한 이 이론에 따르면 시장 경제는 효율적이지만 단지 궁핍과 불행을 공급하는데 있어서만 효율적이다(Hunt 1979).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의 형식적 논리를 그대로 활용하여 정반대의 이론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모든 개인은 반드시 사회의 연간 외부비용을 가능한 크게 하려고 노력한다. 실로 그는 일반적으로 대중의 불행을 조장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가 얼마나 그것을 조장하는가를 알지도 못한다. 그는 단지 그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며, 많은 다른 경우에서처럼 여기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발’에 의거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가 아닌 목적을 촉진한다. 그것이 그의 의도가 아니라고 해서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은 없다. 종종 그는 그 자신의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사회적 불행을 조장하려 꾀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촉진한다(Hunt 1980: 246).

‘보이지 않는 손’ 명제는 각 개인이 사회적 삶의 연관성을 악용해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부의 외부효과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시한다. 왜냐하면 신고전과 경제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아래에서는 모든 생산 및 소비 행위가 사회적인 반면, 생산과 소비를 지배하는 유인 제도는 전적으로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Hunt 1979)”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발’ 정리는 사익의 추구가 더 이상 공익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경쟁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정리의 예측과는 달리 사익과 공익을 분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할 수 있다. 프랭크와 쿡(Frank and Cook 1997)은 오늘날 시장 경제의 중요한 특징을 ‘공유지의 비극’과 ‘용의자의 딜레마’ 개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부문에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경쟁에서 1등의 기량과 2등의 기량은 그들의 보수 차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것이지만 시장은 언제나 1등의 노고만을 기억한다. 이러한 격심한 경쟁은 수확 체증이라는 기술적 요인과 글로벌 경쟁이라는 시장적 요인에 의해 추동된다.

높은 수익은 그 부문에서 과잉 밀집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자신이 이길 확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참가함으로써 시장 전체에서의 우승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 경우 공유지의 비극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참가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를 개인은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이다. 과잉 밀집과 그로 인한 과당경쟁은 불가피하게 과잉 중복 투자를 가져오는데 이는 일종의 군비 경쟁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모두가 평화 전략을 선택하면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경쟁적 투자를 억제하면 사회 전체의 자원 낭비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용의자의 딜레마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 이기심과 의심에 의한 우월 전략 균형이 협조 전략을 압도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과잉중복투자를 하게 된다.

프랭크와 쿡이 “이긴 자가 모두 가지는 사회(Winner-Takes-All-Society)”라고 명명한 이 시장 경제에서는 승자의 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과잉 밀집으로 인해 패자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패자들은 이러한 경쟁에 휘말리지 않았더라면 다른 분야에서 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적 투자가 없더라도 어찌되었거나 1등부터 최하위까지 순번이 정해졌을 것이다. 아마도 이 경쟁에 사용된 많은 자원은 그냥 무의미하게 소모되기 보다는 보다 유용한 사용처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시장 경제에서는 동일한 선택 결과에 대해 그렇지 않았을 경우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미에서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보이지 않는 발’의 정리와 이긴 자가 모두 가지는 사회 논의가 주는 함의는 간결하면서도 중요하다. 시장은 경쟁적일 경우에도 사익과 공익을 대립시키며, 자원의 낭비를 가져와 효율적 자원 배분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AE의 관점에서는 시장을 제약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제도-이는 일종의 시장 영역에서의 군축 협상에 해당한다-를 수립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이라고 본다.

#### 4. 시장 법칙 혹은 최고 (최저) 가격제

대부분의 경제학 원론 교과서들은 수요와 공급 모델을 설명하고 난 뒤, 국가의 시장 법칙 개입의 결과를 논의한다; (1) 예를 들어 노동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한 결과 비숙련 노동자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2) 이러한 변화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불

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다. (3) 그러나 최저 임금제 시행은 노동시장 내 초과 공급(surplus)을 불러 일으키고 정부의 선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4) 장기에서 고용주들의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더 커지므로 실업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논의의 함의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임금 하락은 고용주의 탓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역명의 시장이 결정한 것이다. (2) 또한 제아무리 강력한 정부라 할지라도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 없듯이 수요-공급의 법칙을 폐지할 수 없다(Stiglitz 1997).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경제학자의 90%가 최저 임금제가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믿고 있다(Orlean 2001). 재화 가격의 상승이 수요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만큼 분명한 사실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Card and Krueger 1995)에 따르면 최저 임금의 증가는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다.<sup>12)</sup> 이처럼 교과서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은 경제란 매우 복잡한 상호 의존성이라는 그물망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 경제의 복잡계(complex system)적 속성으로 인해 우리는 한 변수 변화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보편 법칙이 존재하는 대신 매우 다양한 메커니즘들의 조합(Orlean 2001)”들이 있을 따름이다.

현실 세계의 복잡성과 이로 인한 시장 법칙의 예측 실패는 우리가 검토한 CP 가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제 시장의 수요 공급 메커니즘이 원론 교과서처럼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생 변수들이 모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CP 가정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동의 초과 공급(surplus)으로 실업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을 생각해 보자. 앞서 논의와의 연관을 위해 이 노동시장은 비숙련 노동 시장이며 초과 공급의 원인은 정부의 최저 임금제 정책이라고 가정해 보자.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따르면 시장 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이 하락해야 한다. 이는 시장 법칙 예측에 따른

12) 노동시장이 수요자 독점(monopsony)이라면 이윤극대화 기업은 경쟁균형 보다 더 적게 노동을 고용한다. 이는 마치 생산물 시장이 독점(monopoly)일 경우 제품 생산량이 경쟁시장 수준에 못 미치는 것과 유사하다. 독점의 경우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함으로써( $P=MC$  혹은  $P=AC$  Pricing) 생산량이 증가될 수 있었듯이 수요독점의 경우에도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써 고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Card and Krueger (1995) 및 Borjas (2005)를 참고할 것.

정책 권고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임금 하락은 실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다! 왜 그럴까? 상황 전개가 시장 법칙과 어긋나는 이유는 다시 한번 현실 세계의 복잡성 때문이다.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노동 수요 곡선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고정되어 있다는 CP 가정 하에 도출된 것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임금 하락은 노동수요 곡선 자체를 하방 이동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CP 가정이 성립될 수 없다(Bowles and Edwards 1985). 대공황 시기 (신)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현실에 대한 빈약한 인식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추상적 경제 모델과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CP 가정에 기인한다.

시장 법칙에 따른 예측이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세계를 다룰 때 시장 법칙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며 그와 더불어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역사적 배경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경제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AE적 관점에서 볼 때, 시장 개입을 새롭게 이해할 여지가 존재한다. 최저 가격제의 한 유형인 농업 보조금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경제학 원론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농업 생산물에 대한 가격 보조 정책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지대 추구 행위를 불러 일으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농업 보조금은 자중 손실을 넘어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1) 그것은 농촌 지역의 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2) 또한 그것은 의도했던 그렇지 않은 간에 환경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3) 한편 그것은 공급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4) 그것은 또한 농업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정책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5) 마지막으로 그것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 집단에 영향을 끼친다(Dorman 2002).

우리는 토론 과정을 통해 농업 보조금의 지급이 정당한 결정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토론에서는 농업 부문 그 자체의 불확실성 문제, 환경적 외부효과, 공공재적 성격 등이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기초 과학 부문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라면 농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두 경우 문제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지만 AE적 관점은 농업 보조금이 언제나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칙으로서 수용되는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들이며 따라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5. 재산권 혹은 공유지의 비극 문제

교과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의 본질이 외부 효과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권이라는 내부화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교과서의 주장은 코즈(Coase) 및 템세츠(Demsetz)를 포함한 재산권 학파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사유 재산권은 행동 주체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가치 귀결에 가능하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만듦으로써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그리고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에 일치 관계가 성립하도록 유도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성취하는데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송현호 1998).” 이러한 주장은 사적 소유권이 자연 파괴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 기제라는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최소한 제한적이라는 다음 4가지 논거가 존재한다.

(1) 재산권 학파에 따르면 배타적 사적 권리를 보장할수록 경제적 수익은 증가한다. 그러나 브롬리(Bromley 1989)는 현실에서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가 사실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스위스 여름 초원으로부터 나오는 수확만 가지고서 경작자 별로 개인 토지를 구획하고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산권 설정 비용(구획비용 즉, 담장 건설 및 관계 시설 정비 비용)이 수확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초원이 공동 소유되었을 때 몇몇 농부들은 규모의 경제를 누리며 목동을 부리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개별 목초지 소유자가 각각 목동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설사 목초지로부터의 경제적 수익이 재산권 비용 보다 크다 해도 자신의 토지에 전략적 자원-수자원-을 보유하는 농부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수익이 재산권 제도의 함수가 아니라 오히려 재산권이 경제적 수익의 함수일 수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사유 재산권이 환경 오염의 방어 기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술적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신제도학파<sup>13)</sup> -재산권 학파는 그 한 변종이다-는 기존 신고전파와는 달리 재산을 포함한 제도를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13) 여기서 언급하는 신제도학파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주의와는 매우 다르다. 전자는 사실상 신고전학파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Ramstad (1996), Bazzoli, Kirat and Vieleva (1994), Rutherford (1994), Hodgson (1991) 등을 참고할 것.



새로운 연구 주제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은 신고전파의 그것을 답습하고 있으며 따라서 오류 역시 공유하고 있다; 템세츠는 하나의 재산권 제도로부터 다른 재산권 제도로의 이행이 각 제도 아래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가져다 주는 순편익 간의 차이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편익은 잠재적으로 외부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만일 외부 효과의 내부화 이득이 내부화 비용 보다 더 크다면 새로운 재산권 제도가 도입되고 그 결과 외부성은 내부화된다고(Papandreous 1994).

제도 변화에 관한 재산권-신제도학과 식 설명에 따르면 결국 효율성이 제도적 진화의 모터인 셈이다. 다시 말해 제도적 비효율성이 제도 변화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이 갖는 전형적인 오류는 일종의 후방 연역(backward deduction)과 관련된다; 만일 어떤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왜냐하면 제도는 비효율적일 경우에만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는 전형적인 기능주의(functionalism)적 사고인데 이러한 사고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도의 역할(“무엇이 재산권 구조의 효율성을 결정하는가?”)과 기원(“어떻게 재산권이 진화하여 왔는가?”)을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sup>14)</sup>

(3) 소유권이라는 형태로 개인적 유인 및 비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고 따라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 보다 파레토 개선이 발생한다는 재산권 학파의 아이디어는 그 속성상 언제나 보수적이다. 주어진 재산권 레짐 아래에서 작동하는 규칙과 보수, 초기 자원 배분 상태 등은 주체들이 서로 다른 활동에 부여하는 거래비용과 더불어 그 편익 및 비용 배열 역시 결정한다. 이러한 비용과 편익 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고 재산권 도입-외부효과의 내부화 과정을 통해 파레토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 재산권 제도 구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 된다. 슈미트(Schmid)가 이 점을 아주 훌륭하게 요약한 바 있다.

권리가 이전되기 전 누가 그 권리를 가졌었는가를 검토함 없이 잠재적인 보상 테스트

14) 또 다른 신제도학파의 변종인 거래 비용 이론 역시 이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이고 거래 비용의 절감은 효율성의 증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존재하는 모든 제도들에게 효율성이라는 “존재의 권리”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러한 관점 역시 기능주의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트를 권리 이전의 가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 효율성 계산은 언제나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 계산이 출발점까지 타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이한 권리들에 대한 비용 및 편익 분석은 언제나 부분적인 분석이 될 수 밖에 없다. 효율성 계산은 언제나 어떤 권리의 집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만일 이전의 옛 권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권리들에 대한 가이드로 활용될 수 없다(Schmid 1987: 248).

요컨대 재산권 학파나 신고전과 후생 경제학은 이미 주어진 기존의 개인적 권리-재산권-나 요구를 사회적 가치 판단의 궁극적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주어진 제도 배열은 앞서 기능주의를 통해서도 정당화되지만 출발점의 제도 배열 상태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수용함으로써도 정당화된다.

(4) 표준 경제학 교과서들은 종종 재산권을 이용해 환경 오염의 파괴를 막은 역사적 사례로 토지구획운동(Enclosure movement)을 제시한다.<sup>15)</sup> 16-17세기에 벌써 공유지가 황폐화될 정도로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였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인클로우저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추상적 이론에 사로잡혀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클로우저가 환경적 재난을 막기 위한 공동체의 사려 깊은 행동이라기 보다는 시장 수익이라는 지주의 사적 동기에 의해 이끌린 강압적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 P 톰슨에 따르면

인클로우저는 . . . 재산 소유자들과 법률가들의 의회가 제정한 재산에 대한 공정한 규칙과 법에 따라 행해진 계급적 강탈 행위에 다름 아니다. . .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촌락의 관습과 권리라는 전통적인 외피를 찢어 버리는 것이었다. 또한 인클로우저의 사회적 폭력은 바로 자본주의적 재산 개념을 촌락에다 철저히하고 완벽하게 부과한 데 있었다. . . 물론 그와 같은 재산 개념들은 인클로우저가 일어나기 몇 세기 전부터 촌락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 곳에서 굳세게 내려져 오고 있던 촌락이라는 전 자본주의적 지역 공동체 구조 내의 자율적이고 관습적인 요소들과 공존해 오고 있었다. 등본 소유와 이것 보다 더 모호했던 (공동권을 수반한) 관습적인 가족 임차는

15) 예를 들어 맨큐 경제학 교과서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관한 장에 따르면 “(공유자원 문제와 관련해-필자) 토지의 경우에는 보다 손쉬운 방법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공유지를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소유주는 자기 토지에 담장을 쳐 구획을 설정하고 과잉방목을 막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토지는 공유자원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된다. 이와 같은 구획짓기(enclosure movement) 운동은 17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발생했다고 한다(p. 265).”

지역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에 의해 보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무효라고 입증될 수 있었다(Thompson 1980; 나 종일 외 2000: 303).

인클로저의 결과, “확실히 앓고 보잘 것 없는 커튼(Chambers: Thompson 1980)”이었지만 노동자의 완전한 프롤레타리아트화를 저지해 주고 빈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제공해 주던 사회적 완충 부문이 붕괴 되었다. 따라서 공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의 형성 과정은 자원 파괴의 방어기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주의의 입장은 재산권은 물론 중요하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권학파에게만 재산권 문제를 맡길 수 없다(Hodgson 1988)”는 것이다. 재산권 학파의 주장에 반(反)하여 제도주의적 관점은 (1) 사유 재산권이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는 특정한 기술적 경제적 제한이 존재하며 따라서 재산권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재산권 자체가 문제에 대한 만병 통치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재산권 학파식의 기능주의적 설명은 주어진 제도 배열을 언제나 정당화시켜준다는 결함을 지적한다. 대신 제도주의는 기능으로부터 기원을 찾는 접근 방식 대신 그 처음 기원 때 그것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기능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3) 한편 제도주의는 (재산권) 이론이 채택하는 전제와 가정(=기존 재산권 구조)을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는 대신 체제 내에서 재생산되고 동시에 그것의 결과라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한다.<sup>16)</sup> (4) 마지막으로 제도주의는 이론을 먼저 설정하고 역사를 거기에 맞추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이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 6. 공공재와 비용-편익(C/B) 분석

신고전과 경제학자들은 종종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sup>17)</sup> 이러한 불만 가운데 하나가 경제 이외 다른 사회과 과목들(역사, 지리, 사회, 공민)이 비용-편익과 같은 경제학적 개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Conrad: 안현호 2006). 경제학에 문외한인 많은 사람들 역시 비용과 편익을 수량적으로 계산하

16) 이는 사실 맑스 경제학의 방법이기도 한데 제도 경제학 역시 이 방법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17) 중등학교 경제학 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AE적 대안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고 그에 기반해 의사 결정 내리는 것은 공평무사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C/B 분석은 특정한 이해 관계에 의해 미리 결정된 결론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정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어떤 공공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할인율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 정부가 환경을 희생하면서 개발을 강행하려고 할 때 주로 이러한 방법에 의존한다. 둘째 만일 어떤 사업을 기각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업이 가져다 주는 편익은 과소하게 보고하고 비용은 부풀리는 방법이 있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탈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 보건 의료 관련 사업을 축소시킨 바 있는데 이때 이 두 번째 방법이 활용되었다(Campen 1986).<sup>18)</sup>

C/B 분석을 자기 주장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는 대신 합의된 절차에 따라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분석은 종종 편익의 왜곡을 불러 일으킨다. 이 분석 기법은 기본적으로 총비용과 총편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비용 및 편익의 분배 구조나 변화는 분석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공공 사업을 시행하려 할 경우 순편익이 양(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빈민이나 소수 인종, 저개발 지역 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C/B 분석이 특히 공리주의적 철학에 기반해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C/B 분석이 가지는 내적 편익은 그것이 경제적 가치만을 계산에 포함시키고 다른 사회적 가치는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종종 C/B 분석에 따라 계산된 “편익이 그 비용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특정한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필자) 올바를 때가 있다(Campen 1986).” 많은 경제학자들은 어떤 대상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를 갖는다는 말을 불합리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사회가 특정 대상-사람의 목숨이나 환경, 보건, 교육에 대해 가지는 특별한 선호를 의미 있게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 물론 그 대상이 어떤 경우 희생되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이 경우 역시 C/B 분석의 수량적 평가에 의존하는 것과는 다른 의사결정과정과 결론을 수반할 것이다.<sup>19)</sup> 왜냐하면 수량화 과정은 대

18) C/B 분석에 대한 이하의 비판은 주로 Campen(1986)에 의존하였다.

19) 법원은 종종 경제적 관점에서 내려진 판단과는 상이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회 내에서 경제적 가치 이외 또 다른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회 스스로가 표현하는 방법일

상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대신 그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그것도 강제적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sup>20)</sup>

한편 C/B 분석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둘러싼 공적 토론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정책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은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해야 하지만 C/B 분석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을 배제한다. 즉 C/B 분석의 도입으로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정치나 사회적 합의를 대신한다. 그러나 정치 과정을 기계적인 계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그 계산결과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해는 쉽게 무시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대중으로부터 테크노크라트들에게 넘겨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대중들은 기존 정치 제도 전반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앞서 재산권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도주의나 AE적 관점에 따르면 편익 (그리고 비용) 그 자체가 사회적 제도 배열에 의존한다.<sup>21)</sup> 신고전과 경제학에서는 주로 시간 지평이 비용 구조를 결정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제도 역시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sup>22) 23)</sup>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C/B 분석 그 자체는 과학이고 그

---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 미국 최고 법원은 미국섬유제조업연구소 대 도너반 소송 사건 (American Textile Manufacturer Institute vs. Donovan Case)에서 미국 직업안전 및 보건 관리국 (OSHA)이 정한 작업 조건 기준이 비용 편익 분석과는 무관하게 적용되어야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ampen 1986).

20) 상이한 시기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과연 지금 한 생명의 목숨을 구하는 일의 가치가 15년 후 11.5명의 인명을 구하는 것의 가치와 일치하는가? 이 계산에 사용된 할인율 5% 기준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사실상 윤리의 영역이다. C/B 분석이 계산해낼 수 없는 또 다른 사회적 가치의 문제로 환경 문제 역시 생각해보자. 특정한 야생 동물 종(種)의 생존이나 생태계 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의 지불의사(WTP)에 의해 그 내재적 가치가 완전히 측정될 수 없다 (Campen 1986).

21) 앞 절의 재산권 학파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을 참고할 것.

22) 물론 이러한 주장은 앞서 언급한 재산권 학파의 주장, “경제적 수익은 재산권 제도의 함수”라는 주장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재산권 학파가 생각하는 제도란 재산권 제도, 그것도 사유 재산권을 의미한다. 이는 수익이나 비용이 사회제도의 함수라는 본문 주장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권 학파의 문제점은 사유 재산권 제도만이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23) 예를 들어 클라크(J. M. Clark)에 따르면 고정 및 가변비용 여부는 법률 구조에도 의존한다. 만일 트럭을 렌트한다면 이는 가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그것을 구매 소유한다면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Fiorito 1997).

것에 의해 선택된 대안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결과라는 사고는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C/B 분석은 과학(science)이 아니라 과학주의(scientism)이며 그것에 의해 선택된 대안은 특수한 이해를 반영하는 특정 제도 배열 아래에서만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특정한 요구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C/B 분석이 제공하는 해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공공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토론과 다원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모색해야만 한다(특히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그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환경 문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접근은 그 속성상 AE적이다.

우리는 이 절에서 인간 행위의 복잡성(complexity)과 착근성(embeddedness)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와 비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강조하는 AE적 관점을 도입하여 보이지 않는 손 명제를 비판하였다. 이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시장은 경쟁적일 경우에도 사익과 공익을 분열시키며 자원의 낭비를 가져와 효율적 자원 배분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4') 더군다나 시장 법칙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원래의 예측과는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 (1')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 역시 예기치 않은 부의 외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오늘날 경제는 파라미터적 조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조정에 의해 규제된다. (5') 한편 제도 가운데 사유 재산권이 자연과괴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 기제라는 주장은 대단히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다. (6') 공공정책상의 의사결정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C/B 분석은 공평무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주의적 교육을 위한 중요한 모티브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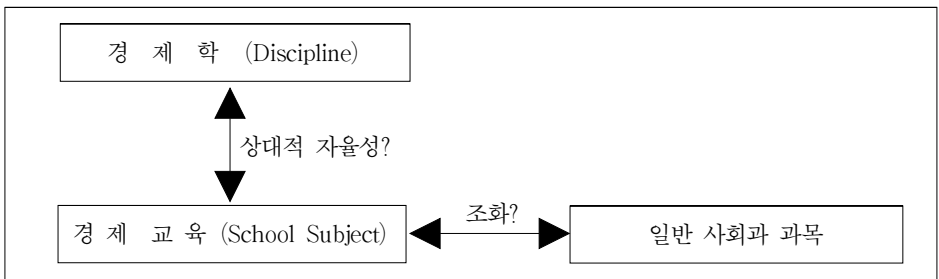
#### IV. 중등학교 경제 교육에 관련한 함의

논의를 위해 경제학 교육 서비스를 산출하는 생산함수를 가정해 보자. 아마 종속 변수로는 경제학 교육의 효과성(effectiveness)이 주어질 것이며 독립변수로는 경제학 교사나 교재의 질, 학생들의 경제학 과목에 대한 열의, 효율적인 평가 방법,

기타 경제학 수업과 관련한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생각해 볼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학 교육과 관련한 많은 연구와 논쟁들은 경제학 교육의 투입 요소들과 산출간의 관계에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분필과 대화의 대안들 (Alternatives to Chalk and Talk; Becker and Watts 1998)”이라고 이야기되는 이러한 논의들은 교육 생산함수의 기술(technology)과 관련된 것으로 “How Problem”이라는 이름 아래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생산함수가 산출해내는 경제학 교육의 내용은 생산함수의 효율성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물론 경제학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서로 상이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제학 교육 생산함수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제학은 추상적인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밀한 논리로 구축되어 있는 반면, 또 다른 경제학은 경험적인 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실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What Problem”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앞 절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What Problem과 연관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신고전파로 대표되는 표준 경제학(Standard Canon)과 제도주의로 이해되는 또 다른 대안(The Other Canon)을 구분하여 왔고 대학의 경제학 교육은 앞으로 후자에 더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대학 경제학 교육과 관련한 이러한 함의는 또한 중등학교 경제 교육과 관련해서도 다소 중요한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분석틀을 도입해 보자.

〈그림 3〉 중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 구조



안현효(2006)는 미국 경제 교육과정 논쟁으로부터 몇 가지 쟁점들을 추출해냈는데 이를 요약한 것이 위의 〈그림 3〉이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중등학교 경제 교육

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과연 중등학교의 경제교육은 대학의 경제학 강의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학습 목표와 방법을 지향해야 하는가? (2) 중등학교 경제과 과목의 내용이 다른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목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앞서 논의한 “What Problem”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논의해보기로 하자.

신고전과 경제학이 지배하는 오늘날 대학의 경제학 강의는 추상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순수 경제학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중등학교 경제교육 역시 소위 “경제학적 이해 (economic literacy)”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대학의 경제학 교육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추상적 모델링을 위해 경제 주체들에게 특별한 성격이 부여되는데 이로 인해 중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 유형이 그대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의무나 타인과의 협력, 사회적 삶의 규칙들을 가르치는 다른 사회과 과목들의 내용과는 모순된다. 경제과 과목과 다른 사회과 과목이 서로 상이한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심한 경우 중등학교 학생들은 혼란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경제과 과목이 대학의 경제학 원론 강의와는 상이한 자율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경제과 과목은 다른 사회과 과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충분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율성과 조화 가능성은 특히 우리가 제안한 바 대로 경제학 교육이 개혁된다면 (제도주의-AE에 기반한 경제학 체계의 도입) 더욱 실현 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할까?

## 1. 학문으로서의 경제학 대 교과목으로서의 경제교육

What Problem은 무엇보다도 경제학 교육의 목적과 관련된다. 매년 대부분의 대학에서 많은 경제학 원론 과목이 개설되고 많은 학생들이 이를 수강하고 있다. 이들 경제학 원론의 학습 목표가 학생들을 전문적인 경제학자로 키우는 것일까? (앞서 지적하였듯이) 물론 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이들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경제학자처럼 사고하는 법을 전수하는 대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알려주어야 하며 경제적 삶의 복잡한 도전에 직면할 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안현호 2006). 이러한 경제학 강의의 목표는 기존의 신고전과 경제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주의-AE 접근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만일 경제학 교육의 목표가 경제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비판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독



립적인 사고를 수행하고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는 민주적 시민을 육성하는 일이라면 추상적인 모델에 기반한 이론 수업 보다 제도적 역사적 접근에 기반한 수업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따라서 What Problem은 또한 For Whom Problem이기도 하다).

중등학교 경제 교육의 목표는 바로 앞서 정의된 대학 경제학 교육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중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곧바로 사회로 편입된다. 이들에게는 사실상 중등학교 교육이 자신의 최종적 교육 기회인 셈이다. 이들이 사회로 진입했을 때 아마도 이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제 문제들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물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1) 한미 FTA는 지금 당장 체결되어야 하는가? 만일 체결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경쟁의 패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 노동력 시장을 추가적으로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항구적인 기업의 구조 조정은 가능한 일인가? (3) 고시나 특정 전문직 노동시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잉 밀집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4)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계에 이로움을 주는가? 추곡 수매제를 폐지한 것은 올바른 일인가? (5) 대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재산권이나 시장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6) 천성산의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 터널 건설을 포기해야 하는가? 새만금 간척 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 두어야 하는가?

만일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논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당면하게 될 위와 같은 문제들을 외면하게 만든다면 중요한 학습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요약하자면 신고전파 경제학의 추상적 모델은 중등학교 경제 교육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는 제도주의-AE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 새로운 접근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지배적이었던 때와 비교되었을 경제학 개혁의 방향과 중등학교 경제교육의 진로를 일치시켜준다.

## 2. 중등학교의 경제과 과목 대 기타 사회과 과목

만일 중등학교 경제교육 시간에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경제 행위를 통해서만 후생이 증가한다고 가르친다면 이는 최근 경제학 연구의 성과를 사실상 무(無)로 돌리

는 일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기적 행위는 그것만으로는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소위 “시장의 패러독스(The Paradox of Market: Nelson 2001)”가 이 문제와 관련된다; 시장의 작동은 물론 이기심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이기심의 극단적 추구는 시장의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한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란 어떤 의미에서는 대규모 차원에서 매수(買收)가 제도화되고 정당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매수 행위에 대한 승인이 전 사회 영역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Nelson 2001).” 순수하게 이기적인 행위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해서만 시장이 구성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신고전파 경제학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면 중등학교 경제과 과목은 이기심과 합리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협력이나 합의를 중요한 가치로 보는 다른 사회과 과목과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주의-AE적 관점을 따른다면 이기적 행동 그 자체가 경제적 성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비이기적 행위 역시 요구되므로 중등학교 경제과 과목에서도 협력이나 신뢰와 같은 다른 사회과 과목들의 주제들 역시 다루어져야 한다.<sup>24)</sup> 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이 경제발전의 원인이라고 보는 반면, 제도주의는 오히려 “잘 작동하는 시장은 경제발전의 결과(Lazonick 1996)”라고 본다.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협력이나 신뢰뿐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강제하는 다양한 제도 배열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과 배달이 분리된 상품 교환은 전형적인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날짜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구매자의 약속은 신뢰할 만한가? 구매자가 넘겨준 화폐는 미래의 지불수단으로 타인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가? 특정 날짜까지 제품을 배달해주겠다는 판매자의 약속은 지켜질 것인가? 판매된 재화가 불량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Aoki 2001)” 신고전파는 물론이고 맑스 경제학 역시<sup>25)</sup>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한 바 없다. 그러나 제도주의-AE 접근은 교환은 하나의 계약이며 계약의 정직한 준수

24)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협력이나 신뢰를 가르치는 일이 앞서 언급한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 문제에 비판적이면서도 타인과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 두 개의 학습 목표는 독립적이다.

25) 맑스 경제학은 상품의 등가 교환을 전제하므로 교환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는 다양한 거래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서 제도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Aoki 2001).<sup>26)</sup>

사정이 이러하다면 협력이나 신뢰와 같은 주제들을 다른 사회과 과목에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경제과 과목에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경제학적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과 과목의 내용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이기적 행동이 사회 전체의 성과를 높인다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잘못된 이론을 전달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기적 행동을 당연히 여기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교육은 이타주의와 시민적 책임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은 맥스웰과 루스의 흥미로운 실험(Maxwell and Ruth 1981)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은 여러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의 사회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비협조적이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간의 행동이 언제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설명된다고 배웠을 것이다.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면 앞서 결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왔을 것이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문적 수용 기준은 상대적으로 더 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과 교육의 내용을 손보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중등학교 경제 교육의 문제를 제도주의-AE 관점에서 풀어나가려는 시도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등학교 교과서 논쟁에도 다소간의 실마리를 제공할 지 모른다. 현재 교과서 논쟁에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중등학교 교과서가 지나치게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현재의 중등학교 경제 수업이 신고전파 경제학에 기반한 기존의 경제학 원론 체계에 보다 가까워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기존 경제학 원론의 방법적 토대는 추상적 경제 모델이며 이는 학생들이 복잡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회과 과목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

26)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같은 이행도상국가들의 경험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Boyer 1996, Nelson 2001).

## V. 결론: 제도주의적 경제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

우리는 이 글에서 추상적 모델과 보이지 않는 손 명제에 기반한 오늘날의 경제학 교육이 많은 형식적 내용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중등학교 경제 교육에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sup>27)</sup>

### 1. 경제학 교육에 있어 다원성의 보장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진리는 언제나 유동적인 상태 아래 놓여 있다. 누군가 최종적인 진리를 이해했고 그것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순간 그 ‘진리’는 도그마가 된다. 경제학이 그렇게 닳고 싶어하는 물리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대상인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 진화 생물학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화의 전제 조건은 다름 아닌 다양성 그 자체이다. 결국 최근 자연과학의 발전 양상이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법론적 다원주의와 지적 진보는 서로 보완적(Fullbrook 2000)”이다. 경제학의 경우도 이에 예외일 수 없다.

다원주의는 학문 발전 자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원래 복잡한 성격을 가진 데다가 물질적인 이해 관계까지 얽혀 있는 경제학의 연구 대상들은 어떤 방법에 기초하여 연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기회 집합이 제시된다. 만일 하나의 연구 방법이 유일하게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여러 방법을 억압한다면 사회는 오로지 특정한 선택 집합 안에서만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 내의 일부 계층만이 성장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Fullbrook 2000). 결국 지적 진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서도 경제학 교육에 있어 다원주의의 선택은 불가피하다.<sup>28)</sup>

27)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는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피쉴리 보고서의 정책 제안과도 일치한다.

28)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표준 경제학의 내용 일부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원성 문제를 지지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환으로부터 이득이나 독점의 사회적 손실은 시장의 세계에 서가 아니라 이론의 세계에서 훨씬 더 타당하다.

## 2. 논쟁적 방식을 통한 경제학 교육 도입

오늘날 많은 학생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지식기반경제, 경제의 금융화 등 자신을 둘러싼 경제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이해하기 원한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복잡한 흐름 속에서 촉발되는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내세울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강의되고 있는 경제학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경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위한 프레임 워크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한정된다.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상이한 설명방식이 아니라 상이한 가치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대립되는 주장은 전체 문제 배열 가운데 일부만을 구성하며 따라서 크게 보아 오히려 보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중화시키는 교육방식을 통해서만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시민을 키워낼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애국자는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Sagan and Druryan 1996).”

우리는 다원성과 논쟁의 방식으로 경제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과 심지어 교사들까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다원적이고 논쟁적인 교육은 졸업 이후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경제 문제를 둘러싼 공적 토론의 예비 학교이다. 감내할만한 수준의 혼란과 불신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일종의 수업료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지불해야 할 수업료를 제 때 치르지 않는다면 이후 훨씬 더 큰 비용-남비 현상이나 과도한 집단 행동, 집단 이기주의 등을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

## 3. 경제학 커리큘럼 내 경제사상사 과목의 강화

경제학 교육에 다원주의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경제 문제를 둘러싼 공적 토론과 논쟁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사상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다원주의적 교육과 논쟁적 학습 모두를 체험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경제사상사 혹은 학설사는 그 자체가 이론 선별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접근과 그들간의 경합을 검토하고 종합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함수를 둘러싼 경제사상사에서의 논쟁을 살펴보자(Hadjimatheou

1994). 케인즈는 효용 극대화의 원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심리 법칙(한계소비성향)의 토대 위에서 경제 주체의 소비행위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전후 미국에서의 경험적 연구들은 케인즈식 소비함수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고 이는 대안적 소비이론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신고전파의 생애주기 가설(life cycle hypothesis)은 이 연구 주제에 관한 지배적 정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후 경험적 증거의 누적을 통해 생애주기가설 역시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소비는 생애 소득이 아니라 현재 소득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애주기가설의 근본적 문제점은 그것이 토대를 두고 있는 최적화 원리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가설의 기본적 전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설명 방식은 사실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듀센베리(Duesenberry)의 항상소득가설이나 베블렌(Veblen) 및 갈브레이스(Galbraith)의 소비행위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등이 그 사례들이다.

소비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이론적 발전 과정은 인간의 실질적 욕구와 필요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과 이들간의 논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학생들은 경제사상사 시간에 이론들의 형성과 수정, 대립, 대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경제 이론의 상대적 성격을 이해하고, 결국 현실적 삶이 가장 중요한 이론 구성의 기준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다시 2000년 프랑스로 되돌아가 보자. 프랑스 학생들은 모델로 구성된 상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도그마를 거부하고 대안적인 경제학 교육 방법 및 내용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프랑스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학 교육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개혁의 방향 역시 많은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겠지만 여기서 논의된 제도주의-AE적 접근은 개혁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에 사전적 가정(a priori hypothesis)을 더욱 더 많이 사용하고 현실의 세계를 이론에 억압적으로 맞추려는 논의를 지속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오직 현실의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적합한 방법을 찾을 경우에만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제도주의적 교육의 채택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 ■ 참고 문헌

1. 김형기, 새 정치경제학, 한울 아카데미, 2001.
2. \_\_\_\_\_, “한국 경제학의 대외 의존성과 주체적 학문 생산,” Mimeo, 2004.
3. 송현호, 신제도 이론, 민음사, 1998.
4. 안현효, “중등과정 경제 교과서의 분석: 교과과정 논쟁,” 2006년 6월 13일 한국사회경제학회 특별세미나 〈교과서 포럼〉 발표문, 2006.
5. 이정진,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시장에 관한 6가지 질문, 한길사, 2002.
6. Aoki, Masahiko, Towards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 Analysis: Motivations and Some Tentative Theorizing,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Vol. 47, No. 1, 1990, pp. 1-19.
7. \_\_\_\_\_, *Toward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The MIT Press, 2001.
8. Bazzoli, L., Thierry Kirat and Marie-Claire Vieleva, “Rules, Contract, and Institution in the Wage-Labor Relationship: A Return to Institutionalism?,” *Journal of Economic Issues*, XXVIII (4), 1994, pp. 1137-71.
9. Becker, William E., “Teaching Economics to Undergradua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XXV, 1997, pp. 1347-73.
10. \_\_\_\_\_, “Teaching 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14, No. 1, 2000, pp. 109-19.
11. Becker, William E. and Michael Watts, *Teaching Economics to Undergraduates: Alternatives to Chalk and Talk*, Edward Elgar, 1998.
12. Becker, William, William Greene and Sherwin Rosen, “Research on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No. 2, 1990, pp. 14-22.
13. Blaug, Mark,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or How Economists Expl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4. Boland, Lawrence A., *The Principle of Economics: Some Lies My Teacher Told Me*, Routledge, 1992.
15. Borjas, George, *Labor Economics*, McGraw-Hill/Irwin, 2005.
16. Boyer, Robert, “The Seven Paradoxes of Capitalism . . . or Is a Theory of Modern Economies Still Possible?,” CEPREMAP Working Paper, 1996.
17. Bowles, Samuel and Richard Edwards, *Understanding Capitalism: Competition, Command, and Change in the U.S. Economy*, Harper and Row, Publishers, 1985.
18. Campen, James T., *Benefit, Cost and Beyond: The Political Economy of Benefit-Cost Analysi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6.
19. Card, Davis and Alan Krueger, *Myth and Measurement: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20. Colander, David, “Retrospective: The Lost Art of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6, No. 3, 1992, pp. 191-8.
21. \_\_\_\_\_, “The Death of Neoclassical Econom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22, No. 2, 2000, pp. 127-43.

22. Cullenberg, Stephen, *The Falling Rate of Profit: Recasting The Marxian Debate*, Pluto Press, 1994.
23. Dorman, Peter, "The Free Trade Magic Act,"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http://www.epinet.org/briefingpapers/dorman-bp2/dorman-bp2.pdf>), 2001.
24. Edmonds, Bruce, "Against: A Prio Theory, For: Descriptively Adequate Computational Modeling," *Post-Autistic Economics Newsletter*, issue no. 10, December ([http://www.brinternet.com/~pae\\_news/review/issue10.htm](http://www.brinternet.com/~pae_news/review/issue10.htm)), 2001.
25. Fiorito, Luca, "The Missing Link: Institutional and Marxism in American Economic Thought," *Quaderni Del Dipartimento Di Economia Politica*, Working paper no. 218, 1997.
26. Foxwell, H. S., "Foreword," Anton Menger, *The Right of the Whole Produce of Labour*, London: Macmillan, 1899.
27. Fullbrook, Edward, "Introduction: A Brief History of the Post-Autistic Economics Movement," Edward Fullbrook ed., *The Crisis in Economics: The Post-Autistic Economics Movement, The First 600 Days*, Rutledge, 2003.
28. \_\_\_\_\_, "Teaching Economics: PAE and Pluralism," *European Association for Evolutionary Political Economy's Newsletter*, July, 2005.
29. Hadjimatheou, George, "Consumer Behavior," G.M. Hodgson, W.J. Samuels and Marc R. Rool eds. *The Elgar Companion to Institutional and Evolutionary Economics*, Edward Elgar, 1994, pp.75-80.
30. Hall, Peter A. and Rosemary C.R. Taylor,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al Studies*, Vol. 44, No. 5, 1996, pp.936-57.
31. Heiner, R.A., "The Origin of Predictable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3, No. 4, 1983, pp.560-95.
32. Hodgson, Geoffrey M., *Economics and Institutions*, Polity Press, 1988.
33. \_\_\_\_\_, "Institutional Economic Theory: The Old versus The New," *After Marx and Sraffa: Essay in Political Economy*, MacMillan, 1991.
34. \_\_\_\_\_, "The Ubiquity of Habits and Rul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1, 1997, pp.663-84.
35. Hahnel, Robin, "Democratic Planners and Market Socialists: Can We Be Friends For Now?," Talks Given to the Political Economy Seminar Series,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Mimeo, 1997.
36. Hunt, E.K., *History of Economic Thoughts: A Critical Perspective*, Wadsworth (김성규, 김양화 공역, 경제사상사, 폴빛, 1983), 1979.
37. \_\_\_\_\_, "A Radical Critique of Welfare Economics," Edward J. Nell ed. *Growth, Profits, and Property: Essays in the Revival of Politic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239-249.
38. Kangas, Steve, "The Methodology of the Chicago School," A Critique of the Chicago School of Economics (<http://www.huppi.com/kangaroo/L-chimeth.htm>), (2006. 8 retrieved).
39. Klammer, Arjo and David Colander, *The Making of an Economist*, Boulder: Westview



Press, 1990.

40. Orléan, André, "Humility in Economics," Post-Autistic Economics Newsletter: issue no. 5, March ([http://www.btinternet.com/~pae\\_news/review/issue 5.htm](http://www.btinternet.com/~pae_news/review/issue%205.htm)), 2001.
41. Lazonick, William, "The Theory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Social Foundation of Innovative Enterprise,"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Vol. 24, No. 1, 2003, pp. 9-44.
42. Mankiew, N. Gregory, *Principles of Economics*, Thomson: South-Western, 2002.
43. Maxwell, G. and A. Ruth, "Economists Free Ride. Does Anyone Else?: Experiments o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5, No. 3, 1981, pp. 295-310.
44. McIntyre, Richard, "Revolutionizing French Economics: Interview with Gilles Raveaud," *Challenge*, Vol. 46, No. 6, 2003, pp. 5-25.
45. Nelson, Robert H., *Economics as Religion: from Samuelson to Chicago and Beyon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1.
46. Papandreous, Andreas A., *Externality and Institutions*, Clarendon Press, 1994.
47. Ramstad, Yngve, "Is a Transaction a Transaction?," *Journal of Economic Issues*, XXX (2), 1996, pp. 413-25.
48. Rodrik, Dani,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49. Rutherford, Malcolm, *Institutions in Economics: The Old and The New Institu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50. Sagan, Carl and Ann Druyan, *The Demon-haunted World*, Random House, 1996.
51. Samuels, Warren J., "Institutional Economics," David Greenway, Michael Bleaney and Ian M.T. Stewart eds. *Companion to Contemporary Economic Thoughts*, Routledge, 1991, pp. 105-18.
52. Schmid, A.A., *Property, Power and Public Choice*, Praeger, 1987.
53. Stiglitz, Joseph E., *Economics*, W.W. Norton & Company, 1997.
54. Thompson, E.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Vintage Books (나종일 외 옮김, 영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상, 하, 2000), 1980.
55. Tsuru, Shigeto, "Keynes versus Marx: The Methodology of Aggregates," David Horowitz ed. *Marx and Modern Economics*, MacGibbon & Kee Ltd, 1968, pp. 176-202.
56. Walstad, William B., "Economics Instruction in High Schoo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XXX, 2001, pp. 2019-51.
57. \_\_\_\_\_, "Economic Education in U.S. High School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5, No. 3, 2001, pp. 195-210.

##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Economics Education - Some Motives for Alternative Economics Education

Young Yong Kim\*

###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alternative economics education theory. For the purpose of the work the paper criticizes standard economics which is characterized by a highly abstract economic model and an invisible hand theorem. In doing so, we give attention to the *Institutionalist Approach* and *Art of Economics*. This paper also shows that these problematic approaches help to provide some insights into the recent debate on high school economic instruction.

**Key Words:** economics education, institutionalism, art of economics

---

\* Instructor, School of Economics and Commer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